

APEC, 온실가스 감축 시드니선언

에너지 집적도 25% 감축 및 숲 복원 골자 ...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9월8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각국이 에너지 집적도 25% 감축 및 대대적인 숲 복원 등을 골자로 한 시드니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발표했다.

정상회의 의장인 하워드 총리는 9월8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킨 뒤 <정지> 단계를 거쳐 <감축> 단계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열망이 담긴 목표(aspirational goals)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는 전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와 자발적인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APEC 원칙에 따라 구속력은 없다.

21개국 정상들은 앞서 기후변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선 2030년까지 에너지 집적도를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에너지 집적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원단위로도 불린다.

또 시드니선언 문안은 2020년까지 역내에서 적어도 2000만ha의 숲을 복원하기 위한 재원을 늘려주도록 촉구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어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희망대로 유엔 후원 아래 기후변화협상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삼림재활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회의장에서 10여 블록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경찰 통제선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3000여명의 시위대는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기후변화 대책이 당장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항의하면서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녹색당 케리 네틀 연방상원의원은 APEC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프랭크 조초는 APEC 정상들의 기후변화 대책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큰 목표가 없다”고 혹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0>